

이슈브리프 368호
(2022. 6.28)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3차 확대회의의 결과와 의미

제368호

김보미 한반도전략연구소



국문초록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간략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에서는 당중앙군사위 직제 개편, 2022년 상반기 군사정치활동 총화, 국가방위력 강화 관련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직제 개편은 당중앙군사위의 부위원장직을 두 명으로 늘림으로써 리병철을 부위원장에 복귀시킨 것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발전을 예고하였다. 또한 당중앙군사위는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작전계획 수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2019년 이래 시험발사해 온 무기 체계들 중 일부가 전선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만일 당중앙군사위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전술핵 형태로 지상과 해상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략군과 포병, 또는 전략군과 해군 사이에 핵무기 운용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기고조를 막기 위한 평시 노력이 절실했다. 다만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사례들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 요인, 기후적 조건, 국내·대외 정치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뒤 당중앙군사위의 집체적 결정보다는 김정은의 최종 결정에 의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어: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력 강화, 전술핵, 7차 핵실험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8기 3차 확대회의는 2차 회의 이후 약 1년여 만에 열린 것으로, 7기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1년에 2차례 이상 소집되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오랜만에 개최된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총화(평가)와 향후 국방건설 임무에 대한 결정, 당의 군사노선과 주요 국방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안건)으로 상정되고 토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고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의 형식, 내용, 특징을 살펴본다.

유례없는 3일간의 회의

이번 당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회의는 형식 면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기존 당중앙군사위 회의와 차이점이 있다. 첫째, 8기 3차 회의는 3일간 진행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7차례 개최된 당중앙군사위 회의 중 일정이 하루를 넘긴 적은 없었다. 기존 당중앙군사위 회의에서는 하루 동안에 정해진 안건들이 모두 다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회의 개최 사실은 보도하되 정확한 개최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도일자와 실제 회의 개최일자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8기 3차 회의는 정확한 회의 날짜와 장소가 공개되었고 북한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전날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언론을 통해 전달하였다. 회의가 3일간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적지 않았으며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 환경에 대한 군 지휘부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8기 3차 회의는 2021년 6월 11일에 열린 2차 확대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치국이 활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북한은 중대한 군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활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군이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전략 무력 운용, 각종 군 건설사업, 재난·재해 복구 사업, 비상방역체계 동원 등 방대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지난 1년여간 당중앙군사위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동안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일부 핵심위원들만 참여한 채 비공개로 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고 당규약을 개정하여 위기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전술핵 배치 가능성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인민군 편제 조정, 군수사업 계획 수립, 국방력 강화 정책 결정, 군 고위직 인사(당중앙군사위원 보선·소환 포함), 재난·재해 복구사업, 경제건설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해왔다. 이번 8기 3차 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 직제 개편, 2022년 상반기 군사정치활동 총화, 하반기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 볼 부분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들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작전계획 수정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간략히 밝혔다. 또한 북한은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들로 미루어 북한이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2019년부터 집중 시험발사한 신형 무기들 중 일부를 전술핵 형태로 전환하여 전방에 배치하거나 동해 상에서의 신형 미니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진수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군과 포병 혹은 전략군과 해군 중 어느 병종에 핵전력 운용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혹은 전방지대에 전술핵을 운용하는 부대를 따로 창설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편제를 조정했을 수도 있다. 핵무력 구조가 확장될수록 전략군과 다른 정규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며 핵전력을 나누어 육·해·공군 안에 포함해야 할 수도 있다.¹⁾ 앞서 노동신문은 2022년 4월 16일에 있었던 김정은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지도를 보도하면서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이 전술핵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전술핵 배치를 현실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편제 조정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리병철 복귀의 의미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리병철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하였다. 앞으로 당중앙군사위는 박정천과 리병철 두 사람이 부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7기 4차 확대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7월 비상방역에 대한 당 결정 집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되었다. 약 10개월 후인 2022년 4월 25일에 열린 조선인민군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로 복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온 인물이기 때

1) 북한처럼 따로 전략군이라는 별개의 병종을 보유하지 않은 파키스탄의 경우 전략군사령부(Strategic Forces Commands)라는 조직이 각 병종에 소속되어 운반수단을 운영한다.

문에,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의 성공적 완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리병철의 복귀는 시간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중앙군사위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 개최된 8기 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리태섭, 조경철, 박수일, 리창호가 당중앙군사위원으로 보선되었음에도 리병철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 아마도 부위원장을 리병철과 박정천 두 명으로 늘리면서 당중앙군사위의 직제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당중앙군사위를 통해서 그의 복귀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실 당중앙군사위에서 핵·미사일 시험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핵실험은 기술적 요인, 기후적 조건, 그리고 대내·대외 정치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뒤 당중앙군사위원회 집체적 결정에 의해서보다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개인의 결정에 의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김정은 집권 이래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는 오직 그의 최종허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다.²⁾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하여 ICBM·인공위성 시험발사를 한 뒤 김정은이 친필서명한 문건들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국영매체들을 통해 공개해왔다. 2015년 12월 15일과 2016년 1월 3일 군수공업부의 4차 핵실험 관련

2) 2013년 4월 1일 통과된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김정은의 독점적인 핵 사용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문건, 2016년 2월 6일 광명성 4호 발사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우주개발국 문건, 11월 28일 군수공업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승인 요건 문건 등에서 김정은의 서명이 발견되었다.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국가우주개발국 등 다양한 무기 관련 기관들에 하달한 김정은의 시험 명령과 허가 서명은 미사일, 인공위성, 핵실험 등 북한의 주요 군사활동 명령의 최고 정점에 김정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서 핵무기는 국가의 독립과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다.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권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북한 정권 내에서 그가 가진 특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기로 했다면, 당중앙위원회에서 시기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중앙군사위의 집체적 판단보다는 김정은 개인의 결단에 의거하여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강의 한반도 군사적 구도 예고

북한은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강대강의 구도를 유지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북한이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따라 작전계획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작계 수정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15 수정에 맞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³⁾

3) 2010년에 작성된 작계 5015는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북한 도발에 초점을 맞추어 핵·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3월 30일 변화된 안보환경과 새로운 위협요소, 연합군 능력의 변화를 반영하여 작전계획을 신규 작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이 같은 방위태세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당중앙군사위에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했다는 중대문제에 한미연합군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에 대항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는 문제, 기만체(decoy)를 활용한 미사일방어체계의 무력화, 조기경보 강화와 신속한 무기 발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해 온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당중앙군사위에서 전술핵을 전선에 배치하여 재래식 전력에서 균형을 달성하거나 실제 전쟁에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을 수 있다. 핵분열물질 생산량이 제한적인 만큼 북한이 다량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북한은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국경지역에 전술핵을 집중배치하여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평택 미군기지 등을 목표물로 삼아 위협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험의 수준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기고조를 막기 위한 평시 노력이 절실했다. 문제는 북한이 전술핵을 한미연합군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제용으로 고려하고 있더라도 억제력 강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이다. 전술핵은 재래식 무기와 함께 실제 전장에서 쓰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하급지휘관들에게까지 무기의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술핵은 지휘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무기의 오사용 가능성, 사고에 의한 무기 발사 가능성 등 전략핵에 비해 우발적 사용에 취약하며 위기상황에서 통신문제에 훨씬 민감하다.

냉전기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들이 실질적인 군사적 이익은 제공하지 못하면서 동서 간에 핵전쟁의 위험과 우발적 핵사고의 가능성만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작은 물리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통해 갈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